

#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☐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『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』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(점용료 등 미반환 관행 개선)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☐ 주요내용

- 점용료 등 미반환 규정 개선(안 제7조)
  - 현행 조례는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8조(공익을 위한 처분)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.
  - 관리청의 부주의로 소하천 내 산출물(토석, 모래, 자갈 등)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하거나, 점용허가 기간의 취소 또는 단축한 경우 남은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조례 개정

- ☐ 개정조례안 : 붙임1
- 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: 붙임4
- ☐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12. 5. ~ 2019. 12. 26. (21일간)

## ☐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##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7조**(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
2.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, 모래,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
3.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
4. 과오납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건설도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건설도로과장 이 경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하천시설팀장 이 재 봉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안 나 (행정 2424)

[별표 2]

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(제3조 관련)

감 면 대 상	감 면 율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	100 %
2.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	100 %
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	100 %
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	100 %
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 %
6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	50%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<u>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① <u>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</li> <li>2.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, 모래,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</li> <li>3.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</li> <li>4. 과오납한 경우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〈신 설〉</p>	<p>③ <u>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(제3조 관련)</p> <table> <tr> <th>감 면 대 상</th><th>감면율</th></tr> <tr> <td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2.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〈신 설〉</td><td></td></tr> </table>	감 면 대 상	감면율	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	100%	2.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	100%	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	100%	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	100%	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%	〈신 설〉		<p>[별표 2]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(제3조 관련)</p> <table> <tr> <th>감 면 대 상</th><th>감 면 율</th></tr> <tr> <td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</td><td>100 %</td></tr> <tr> <td>2.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</td><td>100 %</td></tr> <tr> <td>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</td><td>100 %</td></tr> <tr> <td>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</td><td>100 %</td></tr> <tr> <td>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td><td>100 %</td></tr> <tr> <td>6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</td><td>50%</td></tr> </table>	감 면 대 상	감 면 율	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	100 %	2.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	100 %	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	100 %	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	100 %	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 %	6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	50%
감 면 대 상	감면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신 설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면 대 상	감 면 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	100 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	100 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	100 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	100 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100 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,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